

## ‘성찰적 근대화(reflexive modernization)’의 논의구도

이진복\*

이 글의 목적은 근대 계몽기획과 세계화 논의의 진면목에 기초하여 재근대화의 논의구도를 엄밀하고 다각도로 해명하는 것이다. 이 글의 기본적 시각은 근대화론자와 탈근대화론자간의 논쟁이 계몽기획을 부당하게 단순화시킨 비판의 합리성에 대한 논쟁으로, 기본적으로 ‘1단계 근대화’의 지평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재근대화 논의는 근대화와 탈근대화간의 오해로 가득 찬 논쟁을 극복한 제3의 길이다.

우선 재근대화 논의가 가진 개념적 혼란을 방지하고 본격적 논의를 위해 몇 가지 예비적 개념규정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재근대화 논의를 추상적 논리가 아닌 ‘시대진단학’으로서 세계화라는 우리시대의 ‘조용한 혁명’을 근대화의 연속/단절의 축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있다. ‘근본화(radicalization)’ 테마는 계몽의 현실비판/자기비판의 축으로 재근대화의 구조와 과정을, ‘포용(inclusion)’ 테마는 이성의 복수/단수를 축으로 재근대화의 다차원성과 모순을 분석하고 있다.

재근대화의 논의구도를 요약하면 성찰성(지식)과 재귀성(의도하지 않은 결과)은 재근대화로 이행의 동력이며 의사소통혁명, 지식기반경제, 탈냉전, 개인화의 총체적인 변동인 세계화는 배경을, 제조된 위험은 그 성격을 의미하고 배제(원자화)는 지양대상을, 포용(개인화)은 목적이며 근본화는 그에 대한 합리성의 재구성적 자기비판의 응전이자 수단이다. 그리고 재근대화 논의의 정치적 함의는 ‘제3의 길’이다.

주제어: 재근대화, 성찰적 근대화, 재귀적 근대화, 세계화, 위험

\* 동국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 1. 들어가며

각종 ‘포스트 논의’가 잦아들면서 ‘세기말적 현상’으로 판명되고 ‘성찰적 또는 재귀적 근대화’, ‘근본화된 근대화(radicalized modernization)’, ‘2단계 근대화(second phase modernization)’, ‘고도 근대화(high modernization)’, ‘후기 근대화(late modernization)’, ‘책임 있는 근대화(responsible modernization)’등<sup>1)</sup>으로 불리는 ‘근대화’ 논의가 다시 부흥하고 있다. 벡(Beck)을 포함한 일군의 학자들은 ‘성찰적 근대화 연구소’를 설립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불확실성의 정치인식론’, ‘양가성의 정치사회학’, ‘불확실성의 정치경제학’을 포함하는 15개의 야심에 찬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reflexive’는 ‘성찰적’ 또는 ‘재귀적’으로 번역되는데 그 의미에 대한 논쟁이 있고 특히, ‘재귀적’은 생소하기 때문에 핵심적 의미인 ‘2단계’를 보존한다는 뜻에서 ‘re’ 즉 ‘재’로 축약하여 앞으로 ‘re-modernization’, 즉 ‘재근대화’로 통칭하겠다(Latour, 2003). 물론 필요할 때는 기든스의 ‘reflexive’는 ‘성찰적’으로, 벡의 ‘reflexive’는 ‘재귀적’으로 역하겠다. 재근대화 논의는 우리시대의 근본적 사회변동을 반영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기획이기 때문에 최신의 개념을 사용하고 논의구도가 복잡하고 애매모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근대 계몽기획과 세계화 논의의 진면목에 기초하여 재근대화의 논의구도를 엄밀하고 다각도로 해명하는 것이다. 이 글의 기본적 시각은 근대화론자와 탈근대화론자간의 논쟁이 계몽기획을 부당하게 단순화시킨 비판의 합리성에 대한 논쟁으로, 기본적으로 ‘1단계 근

---

1) 이에 대응하는 ‘1단계 근대화(first phase modernization)’는 ‘단순 근대화(simple modernization)’, ‘고전적 근대화(classical modernization)’로 맥락에 따라 다르게 불린다.

대화'의 지평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벡이 말하듯이 재근대화 논의는 근대화와 탈근대화간의 오해로 가득 찬 논쟁을 극복한 제3의 길이다 (Giddens, Beck and Lash, 1994: 174).

먼저 2장에서는 재근대화 논의가 가진 개념적 혼란을 방지하고 본격적 논의를 위해 몇 가지 예비적 개념규정을 시도하고 있다. 3장은 재근대화 논의를 추상적 논리가 아닌 '시대진단학'으로서 세계화라는 우리시대의 '조용한 혁명'을 근대화의 연속/단절의 축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있다. 4장의 '근본화(radicalization)' 테마는 계몽의 현실비판/자기비판의 축으로 재근대화의 구조와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5장의 '포용(inclusion)' 테마는 이성의 복수/단수를 축으로 재근대화의 다차원성과 모순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글의 전반적 논의를 요약하고 재근대화 논의의 정치적 함의를 언급하면서 끝마치고 있다.

## 2. 예비적 개념규정

근대는 계몽 중의 시대이고 계몽은 비판이고 합리성은 비판의 척도이다. 이때, 합리성은 당위적 요청이 아니라 내재적 잠재력이고 근대성의 다른 이름이다<sup>2)</sup>.

- 2) 여기서 계몽은 인간해방과 자유공론을 핵심으로 하는 비판으로서 칸트에 의하면 “계몽의 정의는 인간이 자기귀책적인 미성년 성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다. 여기서 미성년성은 학문, 예술, 종교, 정치 등 모든 인간 활동 분야에서 “타인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수 없는 무능력”을 뜻하고 “자기귀책성”이란 이 미성년성의 원인이 “이성의 결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지도 없이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결의와 용기의 결여”에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자연이 일찍이 인간들을 타인의 지도로부터 자유라고 선언한 뒤에도 그렇게 많은 인간들이 기꺼이 종신토록 미성년으로 남아 있고 또 그렇게 쉽사리 후견인에게 자신을 위탁하는 원인이다. 미성년이라는 것은 그렇게 마음 편한 것이다.” 칸트가 여기서 이성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다른 감성적 미덕과 악덕인 용기와 타성 및 비겁을 같이 거론하고 있는 것은 그가 데카르트나 라이프니츠와 같이 이성만을 절대시하는 교조적 합리

기든스(Giddens)는 근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문자답한다(Giddens, 1998b).

근대성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그것을 유발했고 어떻게 그것이 발전해왔는가?

근대성은 약 17세기부터 서부유럽에서 출현했고 이어 커다란 영향력으로 세계를 발전시켰던 사회생활 또는 조직의 양식들을 지칭한다. 근대성의 중심 추진자는 서부 유럽의 산업혁명과 정치혁명의 힘이였다.

근대성은 전통을 파괴한다. 근대성과 전통간의 협력은 근대사회발전의 초기단계에서 중심적이었다. 그러나 이 단계는 성찰적 근대화 또는 고도 근대성(high modernity)의 출현으로 종식되었다. 근대 생활의 성찰성은 사회적 실천이 바로 그 실천에 대해 오는 정보에 비추어 항구적으로 검토되고 개혁되는 따라서 그 성격이 변화한다는 사실에 있다.

그런데 기든스는 『근대성의 결과들』에서 근대성의 제도적 차원들을 자본주의, 산업주의, 감시, 군사력으로 나누고 탈결핍체계, 기술의 인간화, 다층적인 민주적 참여, 탈근대화라는 ‘탈근대 질서(post-modern order)’와 대비시키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기든스(위글)는 탈근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위책).

당신(기든스 - 인용자)은 탈근대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런가?

우리는 근대성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의 근본화(radicalization) 단계에 살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말은 문학, 미술, 조소, 건축 내의 스타일이나 운동에 대한 가장 좋은 지칭이다. 그것은 근대성의 본성에 대한 미학적 성찰의 측면들과 이 영역들의 모더니즘적 견해가 어떻게 다른, 최근의 - 포스트 모더니즘적- 견해로 대체되었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

주의자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황태연, 1995a: 200).”

그런데 계몽의 핵심인 인간해방과 자유공론은 ‘유평파적 현실주의’ 또는 영구적인 ‘규제적 유평파’이기 때문에 칸트와 마찬가지로 하버마스도 현재를 ‘계몽된 시대’가 아니라 따라서 탈근대는 더욱 아니고 ‘계몽 중’의 시대라고 규정한다.

기든스는 이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을 “근대성의 본성에 대한 미학적 성찰의 측면(Giddens, 1990: 45)”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포스트 모더니티와 구분한다.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티의 단계로 간다면 이는 사회발전의 궤적이 우리를 근대성의 제도들에서 새롭고 독특한 사회질서로 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위글: 46)”고 말하고 그 개념이 보통 지칭하는 것으로 과거와의 단절, 불확실성, 역사의 목적론과 진보관의 해체, 신 사회운동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기든스는 이어서 이러한 것들을 포스트 모더니티로 보는 것은 오해라고 말하고 “전통적, 섭리적 견해가 해소된 근대사상의 자명성의 결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우리는 근대성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근대성의 근본화(radicalization)의 단계에 살고 있다(위글: 51).”고 한다. 근대성의 핵심에는 “자신을 이해하려는” “성찰성”으로서 “니힐리즘”이 있기 때문이다(위글: 48). 기든스는 항상 “넘어서(beyond)”를 인용부호로 말하고 포스트 모더니티에 대한 자신의 대안으로서 “근본화된 근대성”을 제시하고 포스트 모더니티를 “목적”이 아니라 “근대성의 제도들을 ”넘어서“는 가능한 변형으로 정의”하고 있다(위글: 150). 이는 당시의 포스트 모더니티 논의의 전성기를 맞아 이를 근대성 논의의 근본화에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벡은 탈근대 사상이 “근대성을 인식하는 낯은 방식이 더 이상 왜 타당하지 않는지만 설명하고 거기서 멈춘다.”면서 “결국 우리 상황의 새로움과 위기의 본성에 대해 부정하는 것 같다”고 지적한다. “종말, 해체, 포스트로 보이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언제나 시작이고 재구성이다(Beck and Willms, 2004: 25-26).” 즉 탈 근대론이 사회의 해체(de-structuration)와 사회과학의 탈 개념화(de-conceptualization)라면 재구성(re-structuration)과 더 나아가 재 개념화(re-conceptualization)가 필요하고 이런 의미에서 ‘재근대화’이다(Beck, Bonss and Lau, 2003: 3).

심지어 탈 근대론자인 벨슈(Welsch)조차도 “다원주의를 반성의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해체의 면허로만 이해하고 실천(Welsch, 1994: 423)”하는 ‘포스트 모던적 비합리주의’를 비판하고 근본적 다원성의 철학으로서 ‘철학적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본적 모던(radikal-modern)이지 후기 혹은 탈 모던이라 부를 수는 없는 것(위책: 426)”이라 지적한다.

탈 근대론이 근대성에 대한 문제제기였다면 재근대화 논의는 그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다.

‘성찰성’과 ‘성찰적 근대화’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성찰적 근대화는 근대질서의 한계들과 모순들의 조건이 도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존 사회질서 또는 구조는 그 자신의 힘의 대상이 된다. 성찰적 근대화의 개념은 단순히 성찰(reflection)만이 아니라 근대화의 동학에 의한 자기대면(self-confrontation)을 의미한다. 이 성찰성은 사회를 구성하는 정보의 항구적인 혁신 흐름이 그 사회의 근대성을 수정하는 근대사회의 상황에 의해 창조된다. 이 이행은 성찰적 근대화 과정이다.

행위의 구성 부분으로서 행위의 성찰적 감시는, 인간성이 그 행위의 근거와 이유와 계속 접촉하게 하는 과정인데 인간행위의 특징이다. 전통은 행위의 이 성찰적 감시를 통합하고 공동체의 과거, 현재, 미래의 계속성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양식이다. 전근대 사회에서 성찰성은 대개 전통의 재해석과 명확성에 제한되어 있다. 근대성과 함께, 성찰성은 체계 재생산의 토대로 도입되어 사고와 행위가 항구적으로 서로 굴절된다. 행위는 전통과 관련해서 정통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있는 지식에 비추어 행위의 원리적 방어에 의해 정통화된다. 이것은 타당성의 방법들과 전통의 자원의 본성을 변화시킨다. 왜냐하면 이 오고 있는 지식은 전통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Giddens, 1998b).

백은 재근대화가 다원성의 논의이기 때문에 자체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reflexive’는 오해가 많은 개념이라고 지적한다. 기든스와 래쉬(Lash)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근대화 과정들의 토대, 결과, 문제에

대한 지식과 결부”된 “근대화에 대한 성찰(reflection on modernization)”로 더 좁은 의미이지만 자신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근대화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와 연결”된 “근대화의 재귀성(reflexivity of modernization)”으로 이것은 “성찰과 함께, 재귀성은 또한 무지(non-knowing)의 효과 또는 방지적 효과의 의미에서 반사(reflex)를 포함”하기 때문에 “더 넓은 의미(Beck, 1998a; 84)”라고 한다. 이는 벡이 재근대화의 다른 이름인 ‘위험사회(risk society)’의 출현과 관련하여 두 단계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잔여적 위험사회(residual risk society)’에서는 산업사회의 자기개념이 아직도 지배적이기 때문에 부작용(side-effect)이 체계적으로 생산되지만 공적 이슈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성찰’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의 ‘재귀성’이 주요 동력이 된다. 그러나 재근대화의 ‘위험사회’에서는 산업사회의 위험이 공적, 정치적, 사적 논쟁을 지배하고 산업사회의 제도는 ‘조직화된 무능력’으로 그 정통성이 문제시 되면서 여기서는 ‘성찰’이 주요 동력이 되는 것이다(Giddens, Beck and Lash, 1994: 5-6).

따라서 기든스의 ‘성찰성’과 대비해서 벡의 ‘재귀성’은 성찰 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재근대화로의 이행을 정교화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위험사회에서는 ‘성찰’이 중요한 동력이 되기 때문에 기든스의 개념과 동일하고 더욱이 기든스도 ‘성찰’뿐만 아니라 ‘자기대면’도 자신의 성찰적 근대화 개념정의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강조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벡은 재근대화를 1단계 근대화의 당연시된 전제들을 변형시키는 ‘메타변동(meta-change)’으로 보면서 재근대화의 일반적 준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Beck, Bonss and Lau, 2003: 19-21).

첫째, 경계(boundaries) 또는 경계설정의 복잡성으로, 이는 재근대화의 조작적 정의이다. 경계는 선택이 되었고 다원화되었다. 경계갈등은 경제

설정에 대한 갈등으로 변형되었다.

둘째, 맥락적으로 결정된 경계를 설정할 압력이 증가되었다. 탈 근대론은 경계의 복잡성과 개방을 찬양하지만 재근대화론은 모든 개인과 제도적 결정이 실천적 기반위에서 어떠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합리성들이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기성과학은 논쟁을 종결시킬 결정적 권력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논쟁의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넷째, 이 변동의 주요 결과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들을 예측하는 것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다. 특수한(ad hoc) 문제들에 대해서 특수한 의사결정제도들이 반드시 등장한다.

따라서 근대와 재근대의 경계설정의 목적은 근대성의 단절과 연속성을 해명하려는 발견적 도구(heuristic device)로서 순전히 방법론적이고 실용적인 것이다. 우선 그 구분은 새로운 사고 범주와 이해의 준거 틀을 제공하고 가능한 가장 분명한 용어로 출현하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분석하게 해준다. 그리고 기존 사회과학의 ‘좀비 개념(zombie concepts)’을 비판할 수 있게 한다(Beck and Willms, 2004: 26-29).

### 3. 세계화

근대, 탈근대, 재 근대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언어유희가 아니라 그 논의가 가진 실제적 현실의 내용이 중요하다. 벡에 의하면 재근대화는 지식기반 정보 기술, 세계화, 개인화, 생태위기를 핵심적 특징으로 한다(Beck, 2000b: 36-38). 즉, 재근대화 논의는 우리시대의 ‘조용한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이에 대한 논쟁은 ‘세계화(globalization)’ 논의에서 불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세계화 논의는 재

근대화 논의의 내용을 구성하고 재근대화 논의는 세계화 논의를 근대화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시적, 시대 진단적 논의이다.

세계화는 현재의 근본적 변동에 대한 총칭명사이자 일상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무수히 많은 내용을 갖는, 기존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따라서 다의어로 된 텍스트만을 읽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유사한, 오해가 많은 맥락(context)의존적인 ‘빈 범주(empty category)’이다(Giddens, Gray, Halliday, Held and Kaldor, 2001). 허튼(Hutton)의 세계화의 의미가 무엇이며 오늘날 질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기든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Giddens and Hutton, 2000: 1-2).

많은 증척된 경향들이 연관된다. 첫째, 나의 견해로는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전 세계적 의사소통 혁명이다. 그것의 기원은 세계적인 실시간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했던 첫 번째 인공위성이 발사된 1960년대 후반이다. 과거 30년간 세계적 의사소통의 급격한 집약화가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인터넷의 확산이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 큰 변화는 그 자체 점점 더 세계화되는 무게 없는 경제(weightless economy)의 도래이다. 새로운 지식경제는 확실히 그것에 선행했던 산업경제와 다른 원리들에 따라 작동한다. 현재 금융시장이 그 선두에 있다.

세 번째 세계화는 1989년 이후(post-1989)의 세계를 지칭한다. 회고하면 공산주의 해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방금 언급한 두 가지 요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련은 구 산업경제에서 매우 그럴듯한 진보를 했다. 소련은 새로운 세계적 전자 경제에서 경쟁할 수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세계화는 일상생활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형을 지칭한다. 과거 30년간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전 세계적 경향인 남녀평등의 증진이다. 이 발전은 서구에서만 아니라 다소간 모든 곳에서, 더 일반적으로 가족과 정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들과 연결된다.

세계화의 의미에서 기든스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의사소통 혁명이고 따라서 세계화를 ‘원거리 행위(action at distance)’로 정의한다. 이는 극소

전자기술의 도입에 의한 실시간 의사소통, 따라서 시공간 압축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세계화는 수축의 현상학을 포함한다. 지구의 축소나 거리의 무효화는 문자적 진실이라기보다는 현상학적 진실이다. 공간이 시간 속에서 측정되기 때문에(가령 ”더 가깝다“는 것은 시간적 의미, 광년), 지리적 지점 사이의 시간이 짧아지는 정도에 따라 공간도 축소되는 것처럼 보인다. 물리적으로 먼 지점 사이의 연관이 실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공간은 완전히 ‘사라진다’(가상공간). 세계화는 현상학적인 공간의 배제와 시간의 일반화를 의미한다(Waters, 1998: 83).” 의사소통 혁명의 사회적 의미는 성찰적 시민과 열린 정보사회의 출현이고 개인적 자율성과 유연화로 나타난다.

헬드(Held) 등은 『전 지구적 변환』에서 이를 반영하여 세계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세계화는 “초대륙적·지역간 활동, 상호작용 및 권력행사의 흐름과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거래 - 범위, 강도, 속도, 영향력으로 평가한 - 의 공간적 조직방식에 큰 변화가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과정 또는 일련의 과정들(Held et al., 2002: 36-37)”이다. 나아가 세계화의 유형<sup>3)</sup>을 구분하고 오늘날의 세계화를 ‘밀집형 세

3) 세계화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Held et al., 2002: 48-49).

1. 밀집형 세계화(thick globalization): 경제에서 문화에 이르는 사회생활의 전 영역 또는 전 국면에 걸쳐 지구적 네트워크의 고범위, 고강도, 고속도, 고영향력이 합쳐진 세계를 나타낸다. 현대의 세계화이다.
2. 확산형 세계화(diffused globalization): 고범위, 고강도, 고속도가 결합했지만 영향력은 미약한 지구적 네트워크를 가리킨다. 영향력이 대단히 간접적이고 규제되어 있다. 이 유형은 역사적 전례를 찾기 어렵지만 현대의 지나친 경제적 세계화에 비판적인 사람들에게는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세계화 유형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3. 팽창형 세계화(expansive globalization): 고범위의 지구적 상호연결성이 저강도, 저속도, 고영향력과 결합된 것이다. 흐름의 속도보다는 세계화가 미치는 범위와 영향력이 강하다고 정의된다. 유럽제국의 문명 간 영향력이 막강하여 일시적으로 세계화 범위가 확대된 근대 초기의 제국주의적 팽창이 이 유형에 가깝다.
4. 희박형 세계화(thin globalization): 고범위의 세계적 네트워크가 저강도, 저속도, 저

계화(thick globalization)’라고 정의한다. 헬드 등은 현재의 세계화의 출발점을 20세기의 시작과 함께 한다고 보는데 정보통신기술이 세계화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1960년대 후반이 올바른 것이다<sup>4)</sup>.

둘째, 세계화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 economy)가 그 경제적 토대이다. 지식기반경제는 “근력 및 하드웨어 중심의 외연적 자원(유형자원)기반 성장체제”인 자원(근력)기반 경제와 다른, “두뇌 및 소프트웨어 중심의 내포적 지식(무형자원)기반 성장체제”로서 “고정된 ‘자연적 비교우위’ 경제”가 아니라 “가변적인 ‘인공적 비교우위’ 경제”이다.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적 특징은 ‘부’ 개념이 ‘무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자동화와 생명 공학적 녹색혁명으로 의식주 생산에 필요한 인력이 극소화되고 대중의 가치변동과 함께 국부개념이 유형의 실체적, 물질적 재화의 양적 축적에서 무형의 비물질적, 문화적, 미학적(취향)적, 지적 고부가가치 재화의 질적 축적으로 전환된다.(황태연, 1999; 2000)” 무형화는 결국 장소 고정성의 탈각이기 때문에 세계화와 이음동의어이다.

또한 지식기반경제는 자원(근력)기반경제의 제로섬 게임 논리의 종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계화의 경제적 토대이기도 하다.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와 함께 “개도국은 북부산업국가의 착취-수탈대상으로서, 그것도 원자재 공급국, 판매시장, 직접투자지라는 고전적 역할에 있어서 의미를 잃어갔다.” 이제 제3세계는 ‘소리 없이 주변화’된 ‘제4세계’가 되었다. 이는 제3

---

영향력과 결합된 경우이다. 전근대의 세계화로서 과거 유럽과 중국, 동방을 연결하던 비단 및 사치품 무역로가 이 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4) “비록 ‘세계적인(global)’이라는 단어가 400년 이상 사용되어 왔지만(Oxford English Dictionary 1989), ‘세계화(globalization)’, ‘세계화하다(globalize)’, ‘세계화하는(globalizing)’과 같은 단어들은 1960년대에 와서야 상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961년에 웹스터 사전은 중요한 사전들 중에서는 최초로 세계주의(globalism)와 세계화라는 단어를 수록했다(Water, 1998: 12).” 또한 지식기반경제가 1972, 3년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백이 세계화를 중요한 구성요소로 하는 재근대화의 출발점을 1960년대 후반으로 보는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세계의 비동맹운동이 쇠퇴하고 개도국들도 앞 다투어 참여하는 '세계적 투자자유치의 시대'로 변한 오늘날의 세계질서의 경제적 토대가 된다. 세계화 시대에 개도국들의 발전전망은 산업 국가들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경제로부터 이탈함으로써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위책들).

마찬가지로 국내적으로 계급에 기초한 착취 모델은 지식기반경제에서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테일러-포드주의 하의 미숙련 육체노동자들은 더 이상 유효한 착취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생산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된 구조적 장기실업자가 된다. 즉 배제된 자들은 착취 받을 자격조차도 상실한 것이다<sup>5)</sup>. 이런 측면에서 이들은 산업예비군도 아니고 굳이 맑스의 범주를 빌린다면 롬펜 프롤레타리아트와 유사하다. 오늘날 파트너십에 기초한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투자가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셋째, 세계화는 탈냉전의 상황을 지시한다. 냉전체제 자체가 양 초강대국이 세계의 모든 곳에 개입하여 양분했다는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세계화를 촉진시킨 일면이 있다. 그러나 냉전체제는 우선 군사적 쟁역이 탁절한 지위를 차지하는 '고순위 정치(high politics)'이고 따라서 국가가 절대적 행위자인 당구공 같은 국제정치이다. 반면 탈냉전은 군사적 쟁역 외에 경제, 문화, 인권, 생태적 쟁역들에서의 협력과 교류가 못지않게 중요한 다차원

5) 빈곤하지만 착취 받지 않는 배제된 자들의 경제적 상황은 기계와 같은 물적 자본을 소유하고 있지만 구식이어서 도덕적으로 마모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의 상황과 유사하다. 도덕적으로 마모된 물적 자본은 그것이 물리적으로 마모되지 않았을지라도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아서 폐기되기 때문에 자본이기를 그치고 이를 새로운 물적 자본으로 교체하지 않는다면 자본가도 자본가이기를 그친다. 마찬가지로 지식기반경제에서 인적 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미숙련 육체노동자의 노동력은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이기를 그치고 사회적 자본을 동원하여 인적 자본을 갱신, 축적하지 않는다면 영구적으로 노동자이기를 그칠 것이다(Littlewood et al., 1999: 105-106). 따라서 "부와 빈곤의 연관이 사라진다는 것, 더군다나 바우만(Bauman)이 지적하듯 그것이 세계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야말로 지구시대의 새로운 점이다(Beck, 2000: 115)." 정확히 말하면 "세계화"가 아니라 지식기반경제이다.

적 쟁역체제의 '저순위 정치(low politics)'로서, 국가는 세계체제에서 강력한 행위자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한 다른 행위자와 조직들과 무대를 공유하는 혼합행위자 체제(mixed-actor system)로서의 세계정치(global politics)이다(McGrew, 1992: 13).<sup>6)</sup>

그리고 논의구조상 양극체제는 자본주의/사회주의간의 대체, 이행에 관한 타자부정의 논의였다면 세계화는 어떤 다른 것으로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부정의 과정이다. 따라서 오늘날 지배적 정치 논의가 적과 우리를 선명히 나누는 이국민 정치(two nation politics)가 아니라 중도에 기반을 둔 일 국민 정치(one nation politics)로 전환되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Jessop et al., 1998). 탈냉전의 해인 1989년이 '세계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의 원년이라고 많이 거론되는 것(Anheier, 2004: 7)은 이런 배경에서 이다.

넷째, 세계화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라고 불리는 일상생활의 변형을

---

6) 마약, 에이즈, 광우병, 화학연료의 사용, 핵폐기물 관리,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지구온난화 등과 같은 국내문제와 국외문제, 내부 정치적 쟁점과 외부적 쟁점, 개별국가의 주권적 사안과 국제적 문제가 더 이상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 '경계의 문제(boundary problems)'라는 일련의 중요한 새로운 유형의 특징이 나타난다. 따라서 초경계적 조정과 통제(transboundary coordination and control)가 필요한 '중첩된 운명공동체(overlapping communities of fate)'의 세계에 살고 있다(Held et al., 2002: 132-133).

나이(Nye)는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Nye, 2004: 4).

“현대 정보 시대의 권력 분포는 상이한 이슈들에서 크게 다양하다. 미국은 ‘단극’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이라고 한다. 그러나 맥락은 언뜻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세계정치의 의제는 수평적으로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플레이해야만 이길 수 있는 3차원의 체스게임과 같이 되었다. 고전적인 국가간 군사 이슈들의 상위 체스 판에서 미국은 세계적으로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진정으로 유일한 초강대국이고 단극성 또는 헤게모니의 전통적 의미에서 그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가간 경제 이슈의 중위 체스 판에서 권력의 분포는 다극적이다. 미국은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의 동맹 없이 무역, 반독점, 금융규제의 이슈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여기서 미국 헤게모니를 말하는 것은 거의 의미 없다. 테러리즘, 국제범죄, 기후변동, 전염병 확산과 같은 초국가적 이슈의 하위 체스 판에서 권력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 사이에 광범하게 분포되고 혼란스럽게 조직된다. 여기서 단극 세계 또는 미국 제국이라 말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나타낸다. 세계화는 저기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혁명’이다. 이때 “개인화는 선택의 증가된 자유가 질서의 해체와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결코 함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탈코트 파슨스가 제도적 개인주의(*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라고 불렀던 것이다. 제도에 의존하는 개인적 상황(Beck and Beck-Gernsheim, 2002: 11-12)”이다. 오늘날의 개인화는 ‘제한된’ 특수한 과정이 아니라 ‘사회의 기본조건들이 선호하거나 촉진하는 민주화’된 보편적 과정이다.

개인화의 핵심적 내용은 경제적, 육체적 안전에 최고의 우선성을 두는 경향인 ‘물질주의적 가치(*materialist values*)’에서 자기표현과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탈 물질주의적 가치(*post-materialist values*)’로의 변동이다. 잉글하트(Inglehart)는 이를 희소성명제와 사회화명제라는 가설과 경험적 연구로서 세대교체에 의한 탈 물질주의적 가치로의 변동이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 투표와 정당가입과 같은 관료적이고 엘리트가 지도하는 참여(*elite-directed participation*)형식이 쇠퇴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동기화되고 엘리트에 도전적인 참여(*elite-challenging participation*)형식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Inglehart, 1997). 물론 원리주의가 이에 대한 반동으로 새로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가치변동이 오늘날 전 세계적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의 한 이유일 것이다. 그와 동시에 제3섹터 혁명<sup>7)</sup>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우연이

7) 미국의 경우 정부에 등록된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는 공익, 비영리 자원봉사 조직의 추세를 보면 50년대에 5만여 개에 지나지 않았으나 60년대 중반에는 30만 여개로, 70년대 중반에는 70만 여개로 급속한 성장률을 보였다. 즉 미국의 제3섹터는 60년대와 70년대에 와서 ‘혁명적인’ 확대발전을 한 것이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알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1960년대 연간 평균 11,000개의 제3섹터 조직들이 창설된 데 비해 1987년 한 해에 54,000개가 증가된 강한 추세를 보였다. 이탈리아에서는 1985년 조사에 따르면 1977년 이후에 창설된 조직들이 전체의 44%에 이를 정도로 70년대 이후의 강한 추세를 반영했다. 또한 제3섹터 혁명은 선진사회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강한 추세를 보여주며 세계적으로 발전되고

아니다. 이것이 의회외적인 규칙위반을 목표로 하는 직접정치의 ‘하부 정치(subpolitics)’가 출현하고 있는 배경이다(Holzer and Sorensen, 2003).

근대화의 연속/단절의 축으로 볼 때 세계화는 근대화와 이음동의어로, 연속성을 가지나 그 단계가 다르다는 의미에서 단절성을 가진다. 의사소통 혁명, 지식기반경제, 탈냉전, 개인화는 모두 근대성의 지평이지만 의사소통 혁명은 실시간 의사소통으로 가일층의 시공간 압축을 가능하게 했다는 의미에서, 지식기반경제는 자원(근력)기반경제의 물적 자본을 축약시키고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생산력에서 사활적 요소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탈냉전은 좌/우 패러다임을 넘어 인간해방과 자유공론이 보편가치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개인화는 초기 부르주아지의 제한된 특수한 과정이 아니라 보편적 과정으로서 ‘제도적 개인주의’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단계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연속성을 강조하는, 따라서 어떤 질적 변동을 부정하는 1단계 근대화 논의나 단절성에 주안점을 두어 이를 근대성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는 탈 근대화 논의나 모두 편향적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재근대화가 진행되는 방식과 연관되어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오늘날 재근대화의 과정은 잉글하트가 말한 ‘조용한 혁명’으로 체계 수준의 변동이 가치변동이라는 개인수준에서 매개되는 친밀한 혁명으로 저기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나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다. 벡은 그 공식을 “욕구된 것 + 친밀한 것 = 새로운 근대성(Beck, 1998b: 91)”으로 정의한다.

재근대화의 친밀한 혁명, 즉 단절이지만 연속인 이유는 “창조적인 자기 파괴의 ‘주체’는 위기가 아니라 서구 근대화의 승리 그 자체(위책: 80)”이기 때문이고 “사소한 것, 친밀한 것, 때로는 혁신에 대한 소망이 사회변화의 힘을 자신이 가지고 있음을 발견(위책: 98)”하기 때문

---

있는 지구촌 현상이다(주성수, 1999: 83).

이다. 재근대화는 “혁명은 없지만 또 다른 사회로 가자고 주장한다(위 책: 91).”

#### 4. 근본화(radicalization)

합리성 자체가 의심스러운 개념이 되었다는 것은 탈 근대론자의 커다란 공이다. 그러나 탈근대 논쟁은 합리성 논의의 이중적 구조를 망각한데서 결과한다. “계몽주의적 비판기획은 곧 모든 미신과 무지, 모든 비효율성과 모든 착취지배로부터의 합리적(즉, 비주술적, 비낭만적) 해방기획이고 이 비판의 반성적 적용은 지식에 대한 과학적주의적 미신과 공리주의적 미망에 대한 계몽적 비판, 즉 ‘계몽의 계몽’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요는 계몽의 이념이란 정치 실천적으로 해방적 비판이면서 이론적으로는 ‘자기 비판적’ 반성의 원리인 것이다(황태연, 2004: 53).”

계몽기획은 애당초 현실계몽과 자기계몽의 이중적 과정이고 미완의 기획으로서의 ‘계몽의 계몽’ 과정이다. 자기계몽 없는 현실계몽은 목적 없는 목적합리성으로서의 도구적 합리성으로, 몽매로 전도되고 만다. 오늘날 합리성 자체가 의심스러운 개념이 되었다는 자체가 자기비판 즉 자기계몽이 단계 규정적 과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사회의 두 가지 국면이 가지고 있는 차이는 전자(1단계 근대화 - 인용자)가 산업 이전의 전통사회를, 후자(재근대화 - 인용자)가 산업사회의 ‘전통’과 안전보장을 자기 해체와 교체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정확히 이것은 자기 적용을 의미한다. 마치 산업사회의 근대화가 신분제적이고 봉건적인 사회유형을 해체하고 교체했던 것처럼 똑같이 독립적으로 된 근대화의 과정에서 산업사회는 유린되고 철폐된다. 사회변동의 동력은 더 이상 목적합리성이 아니라 부수 효과(다수의 근대), 즉 위협, 위협, 개인화, 세계화 등이다(Beck, 1998b: 96).

재근대화는 근대화의 자기적용, 즉 1단계 근대화의 근대화, 합리화의 합리화, 계몽의 계몽을 의미한다. “이제 사회의 비판이론이라는 자리를 사회적인 자기비판의 이론 즉 재귀적 근대의 갈등노선들에 대한 분석이 대신 차지하게 된 것이다(Beck, 1998b: 75).” 고전적 근대가 현실비판이라면 재근대는 현실비판으로서의 자기비판이 단계 규정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근본화<sup>8)</sup>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탈 근대론은 그것이 합리적 비판이라면 근대의 자기비판, 자기적용으로서 근본화된 근대의 잘못 붙여진 이름이고 재근대화는 탈 근대론의 자기비판, 자기적용으로서의 포스트-포스트모더니즘이라 할 것이다.

탈근대화가 아니라 재근대인 이유를 다른 식으로 말하면 산업사회의 근대가 반편의 근대로서, 1단계 근대가 “근대적 봉건사회(Beck, 1997: 180)”이기 때문이다.

진행 중인 변혁의 청사진에 따르면 산업사회는 준(semi - 반편의) 근대사회이며 그 내부에 구축된 반(counter)근대적 요소들은 낡거나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산업시대 자체의 구조이며 생산물이다. 산업사회라는 개념은 근대성의 보편적인 원리들 - 시민권, 평등, 기능적 차별화, 논증 및 회의주의의 방법 - 과 이 원리들이 부분적이고 부분적이며 선별적인 기초위에서 실현될 수밖에 없는 그 제도의 배타적인 구조 사이의 모순에 따르고 있다(위책: 46).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근본적 변동은 산업사회의 1단계 근대의

---

8) radicalization은 radicalism이 보통 속도의 의미를 갖는 급진주의로 번역되듯이 급진화로 번역되어야 하나 여기서는 radical이 뿌리(root)의 어원을 가진다고 했을 때 ‘근본화’로 역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근대성의 radicalization은 가속의 가속을 의미하지 않고 산업주의, 산업 주의적 형식에 의한 근대성의 분할에 대해 근대성의 원리의 입증을 의미한다. 즉 스스로에 대한 근대성의 일관된 적용에서 산업근대성의 자기제한, 자기비판, 자기개혁(Giddens, Beck, and Lash, 1994: 54).” 또는 “radical이란 뿌리(root)로 가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Beck and Willms, 2004: 136).”

‘신 봉건적 요소’를 지양하여 근대를 근본 화하는 재근대화이다. 18세기 계몽주의를 비판적으로 종합한 칸트의 3대 이성비판서가 이미 이성을 성역화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저작들이고 근대이성은 이성비판 ‘일반’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감상주의적, 비이성적, 신비적’ 비판만을 배격할 뿐이다.

봉건적 지배와 싸우던 소상공 생산적 자유도시의 이데올로기로서 태동하여 인간 해방을 추구하던 이 순수하고 자기 반성적이던 계몽기획이 미상불 자본기제와 강제 결합되면서 비이성(지배와 전쟁)을 확대 재생산하는 기획으로 ‘타락’을 겪기 때문에 막스에게서 이론적으로 완성된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구제적 비판’, 즉 제1차 ‘계몽의 계몽’을 겪는다.

막스의 혁명적 비판의 압박 하에 니체의 허무주의를 ‘비판적 보수주의’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성찰하는 막스 베버에 의한 제2차 ‘계몽의 계몽’으로 이어진다. 베버는 비록 잘못된 이론적 구도이긴 할지라도 합리화 과정과 자유 및 ‘생의 의미’의 상극성 테제를 통해 합리성에 대한 반성을 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과시즘과 스탈린주의의 충격 속에서 근대 합리성의 비판적 해부 또는 계몽이성의 비판적 논의는 1940-70년대 프랑크푸르트학과와 미셸 푸코의 저작들을 배경으로 다시 포괄적으로 개시되어...제3차 ‘계몽의 계몽’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황태연, 1995b).

이런 맥락에서 기든스, 벡, 래쉬의 재근대화 논의를 제4차 ‘계몽의 계몽’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배경은 세계화이다. 물론 재근대화가 2단계 근대로서 이전의 계몽의 계몽 과정들을 1단계 근대화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는 세계화에 대한 평가에 달려있고 그 변동이 그만큼 근본적이라는 것을 극화시키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5. 포용(inclusion)

탈근대 논쟁이 한편의 합리성에 대한 논쟁인 또 다른 이유는 근대성을 단수로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분화된 목적합리성에 대한 반대의 해석간의 논쟁, 즉 이수와 백작과 같은 모순된 복수의 합리성들을 단수로 부르는 자승자박의 착시현상이다. 근대론자는 포용-목적 합리성을, 탈 근대론자는 배제-목적 합리성을 동일한 합리성이란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이는 1단계 근대화에서 목적합리성이 차지하는 탁월한 위치를 가정한다면 이해할만 하다. 하지만 합리성은 애초, 항상 복수의 합리성들이었고 그것도 모순적인 합리성들을 포함한다.

그것은 베버가 규정했듯이 목적 합리성(실리주의적 합리성)과 가치합리성(또는 헤겔의 이성)의 차별성 정도의 분화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목적 합리성 자체가 도구적 합리성(마스의 노동생산성, 즉 노동 기술적 합리성), 지배 전략적 합리성(하버마스의 강권 전략적 행위의 합리성=마스의 착취적 생산성, 지배 기술적 합리성), 교환전략적인 합리성(등가성 또는 상보성) 등으로 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치 합리성(베버) = 객관적 이성(헤겔) = 윤리적 규범성, 주관적-미학적 합리성(진실성 또는 적실성), 소통적 이성(하버마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합리성들(복수)은 근대 세계 속에서 서로 혼화되어 있을지라도 이 중 어떤 것들(노동 기술적 합리성 대 지배 기술적 합리성, 소통적 합리성 대 지배 기술적 합리성)은 적대적 상쟁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성에 대한 합리적 비판'(아도르노)의 전제는 이성 또는 합리성 개념의 분별작업이고 비판은 노동 기술적 합리성, 규범적 합리성, 주관적 합리성, 소통적 합리성 등의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이 합리성들의 질곡으로서의 지배 기술적 합리성에 대해 가해져야 한다(황태연, 1994a: 263-264).

포용과 배제의 모순을 비판이론의 맥락에서 합리성 논의로 번역하면 1세대 비판이론가의 논의 틀은 도구적 합리성(목적 잃은 목적 합리성) 대 미메시스이고 이는 총체적 단일이성비판으로, 일차원적 사회를 탈출할 수 없는 비판론으로 귀착되고 만다. 비판의 합리적 근거를 정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합리성의 비합리적 비판의 딜레마를 타개하기 위해 하버마스는 언어학적 전회를 통해 비판의 합리적 근거를 의사소통합리성으로 정초한다. 2세대 비판이론가인 하버마스는 화폐와 권력을 매개로 한 성공 지향적 행위인 목적 합리적 행위(합리성)와 언어를 매개로 한 협의 지향적 행위인 의사소통적 행위(합리성)간의 대립으로 자신의 논의를 전개한다. 하버마스에게 목적 합리적 행위의 장으로서의 물질적 (재)생산과정인 경제체계와 국가체계 즉 체계 자체는 무죄이고 다만 체계가 의사소통적 행위의 장으로서의 상징적 (재)생산과정인 생활세계에 침입, 식민화하여 화폐화, 관료화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황태연은 정당하게 하버마스의 목적합리성 즉 체계합리성을 노동 기술적 합리성(지도 합리성)과 지배 기술적 합리성(지배 합리성)으로 분화, 이 체계내적 모순으로 하버마스의 체계순응논의를 비판했다. 하버마스가 자신의 이론의 배경이 된 테일러-포드주의에 기반을 둔 ‘전후 사회복지 국가적 합의’의 황금시대를 과도하게 신뢰하여 그것의 내적 모순을 무시, 체계합리성 자체의 완전무결성의 이론으로 전도되었다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지식기반경제에서 지도 합리성과 지배합리성은 포용과 배제의 형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지옥과 천당의 심판관인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은 창의성과 능동적 신뢰를 본질로 하는 것으로 이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자본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목적 합리적 사용, 즉 목적 합리화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다. 이는 ‘부’ 개념이 ‘무형화’되고 있는 지식기반경제에서 경제적 가치의 대부분이 물질대사가 아니라 ‘정신적 진선미 등의 의미와 관련된 인간과 인간간의 의미대사’인 새로운 비물질적 두뇌생산 ‘활동’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황태연, 2004: 337-358). 오늘날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사활적 이해가 되었다는 것은 그 개념 자체가 의미하듯이 인간과 사회의 자본화가 전면적으로 관철되어 시장사회의 출현

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자본의 인간화와 사회화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식기반경제에서 목적합리성의 최적화는 의사소통 합리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의사소통합리성과 목적 합리성의 화해, 즉 생활세계와 체계의 화해, 따라서 ‘생활세계에 의한 체계의 민주화’도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 토대이다<sup>9)</sup>).

이것이 포용이고 래쉬가 “단순 근대화가 종속을 의미했다면 성찰적 근대화는 주체의 임파워먼트와 연관된다. 단순 근대화가 우리에게 원자화, 정규화, 개별화(individuation)의 푸코의 시나리오를 준다면 성찰적 근대화는 우리의 자연적, 사회적, 심리적 환경에 대한 자율적 주체성의 긍정적 가능성을 여는 진정한 개인화(individualization)를 개방한다(Giddens, Beck and Lash, 1994: 113).”라고 말한 근거이리라. 그에 의하면 “성찰적 근대화 명제는 구조로부터의 행위자의 자유(Freisetzung) 또는 점진

9) 인적 자본이 물적 자본과 다른 근본적 차이는 노동자와 분리 가능한 물적 자본과 달리 인적 자본은 그 체현성 때문에 노동자와 분리불가능하다는 것이다(양신규, 류동민, 2000). 따라서 자원(근력)기반경제에서는 자본가가 물적 자본을 노동자와 분리하여 자신의 소유권 하에 집중, 이를 매개로 노동자를 지배, 착취할 수 있었던 반면, 지식기반경제에서 인적 자본은 노동자와 분리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자는 신분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인적 자본은 전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소유로 귀착된다. 다시 말하면 인적 자본은 원리적으로 수탈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적 자본에 기초한 노동만을 착취할 수 있고 그 착취도 지배의 성격을 탈각한 지도적 의미의 형용모순적인 긍정적, 적극적 착취이다. 왜냐하면 인적 자본의 생산적 성격은 본질적으로 창의성이므로 위계적이고 강압적인 기존의 지배로서의 착취조직에서 그것의 온전한 생산력을 최적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서 사회적 자본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기든스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행위자들이 사회적 지원을 위해 동원하는 신뢰 네트워크(trust network)로서 이때의 신뢰는 탈 전통화 시대에 행위자들이 능동적으로 축적하고 동원하는 능동적 신뢰이고 그것에 특징적인 것은 성장성, 자율성, 대화이다. 즉 지식기반경제에서 기업은 조직 인간보다 창의적 인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업의 주요 조직원리는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네트워크, 파트너십, 협력적 벤처가 된다.

기든스는 오늘날 세계화와 일상생활의 변형이 결합된 과정의 결과로서 민주화 과정이 작동하는 적어도 네 가지 사회적 맥락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 사적 생활 영역의 정서의 민주화, 조직 영역의 관료적 위계질서를 보다 유연하고 탈 중심화된 권위 체계로 대체하는 분명한 경향, 시민사회 영역의 사회운동과 자조집단의 발전, 세계적 수준의 민주화가 그것이다(Giddens, Beck and Lash, 1994: 193-194).

적 자유를 핵심적 가정으로 한다(위책: 119).” 따라서 “성찰적 근대화는 구조와 관련하여 계속 증가하는 사회적 행위자(actors or agency)의 권력의 이론(위책: 111)”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재근대화가 경제성장, 특히 소위 ‘성찰적 축적’ 이라 불리는 새로운 틀의 전개 속에서 시작된 매우 강력한 사회변화라고 언급한다. 재근대화는 행위주체가 구조로부터 자유로워짐에 따라 발생하거나 보다 정확히 말하면 행위주체가 규칙에 얽매인 ‘포드 주의적’ 구조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만 구조적 자본축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 자체가 사실상 행위주체를 해방(개인화 = 유연화)시켰다고 말한다. 여기서 포용과 배제의 모순이 나타난다. 정보통신구조 안에서 즉, 전문가 체계의 전문가로서 변형된 중간계급과 이 구조를 위해, 그리고 이와 함께 일하는 성찰적 노동계급으로 구성된 (신)신 중간계급((new) new middle class)은 성찰성의 승자가 되고 이로부터 배제된 언더클래스(underclass)는 성찰성의 패자가 되는 것이다(위책: 127-132). 배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형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져야할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책임인 시민권으로부터 배제된 비시민(non-citizens)의 문제이고 이런 의미에서 최상층의 자발적 배제로서의 상층배제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Giddens, 1998a: 102-104).

그러나 다시 역설적으로 호화성채의 능력제일주의(meritocracy)와 계토의 빈곤의 문화(culture of poverty)에서 확인되듯이 가장 명시적인 부와 빈곤조차도 사회적 성격을 상실하고 개인의 능력으로 치환된다. 즉, 개인의 성취감과 수치심이 집단의 계급의식을 대체한다.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승자독식과 빈곤의 덫(poverty trap)은 자기귀책적인 심리학적 성향의 문제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불평등은 ‘사회적 위협의 개인화’로 재정의 된다(Beck and Beck-Gernsheim, 2002: 39-40).

지식기반경제가 양가적인 고도 위험 경제(high risk economy)이기 때문이다.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인적 자본은 개인에게 체화된 창조적 인식능력으로, 사회적 자본은 관계 속에 있지만 개인에게는 의사소통능력으로 보인다. 더욱이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소유’ 자체, 즉 포용 자체가 항상 위협으로 경험된다.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불확실성의 항구화 때문에,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도덕적 마모 속도가 너무 빠르고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식은 위협과 다른 것이 아니며 지식의 위협, 위협의 지식이다. 여기에 일상생활의 변형에 따른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으로 상황은 더욱 위협천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때의 위협은 1단계 근대의 ‘외적 위협(external risk)’과 다른 재근대의 ‘제조된 위협(manufactured risk)’이다. 외적 위협과 그 결과는 가시적이고 국지화될 수 있고 제한된 대중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자연 또는 전통의 고정성으로부터 도출된 원인에 의해 외부에서 개인에게 가해지는 사건의 위협으로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고 따라서 보험으로 완전히 관리될 수 있었다. 반면 제조된 위협은 비가시적이고 경계가 없는 근본적 불확실성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된 의미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이 더 많이 피드백 될수록 더욱 더 불확실성을 생산하는, 따라서 사적 보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재근대의 위험사회에서는 역동적 빈곤과 실업이 나타나고 빈곤과 부의 경계가 유동적이며 불안전이 사회 안의 거의 모든 장소에 퍼진다(위책: 49-52). 지금까지의 통념과 달리 빈곤은 종종 잠정적인 생애주기의 에피소드일 뿐이고 능동적으로 극복되며 다른 한편 일시적 경험과 잠재적 위협으로서의 빈곤의 경험은 종래의 생각과 달리 어떤 주변집단들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계급까지 확대될 수 있다. 즉, 빈곤은 시간과 연관되어 일시화(temporalisation)되고 사회적 경계를 넘어 초월화(transcendence)된다

는 의미에서 개인화된다(Leisering and Leibfried, 1999: 9-10). 따라서 프롤레타리아와 같이 시대정신을 독점한 주체가 있다는 식의 섭리주의(providentialism)는 기각된다. “위험의 축소될 수 없는 특성을 인식하는 것은 보장 없는 비판이론(critical theory without guarantees)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인식이 또한 해방의 자원이다(Giddens, 1994: 21)<sup>10)</sup>.” 결국 재근대화의 결과는 양가적이다. ‘위태로운 자유(precaious freedoms)’, 즉 개인화의 해방과 원자화(atomization)의 아노미는 정치적 폭발력을 가진 이음동의어가 된다(Beck and Beck-Gernsheim, 2002: 16).

## 6. 끝내며

이상의 논지를 종합하면 재근대화 논의는 지식이자 무지 또는 성찰성 이자 재귀성(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의해 배제(원자화)와 포용(개인화)의 제조된 위험의 성격을 갖는 근대화의 연속의 단절인 세계화의 변동 속에서 자기비판으로서의 현실비판인 근본화로서 합리성의 다원적 재구성의 포용을 지향하는 2단계 계몽기획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성찰성과 재귀성은 재근대화로의 이행의 동력이며 의사소통혁명, 지식기반경제, 탈냉전, 개인화의 총체적인 변동인 세계화는 배경을, 제조된 위험은 그 성격을 의

10) 위험사회의 보장 없는 불안은 그동안 정치화되지 않았던 결정과정들을 정치화시킨다. 위험은 궁핍의 ‘원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불안의 ‘이유’에 의해 야기되어 위험의 정의(definition) 그 자체가 주요 논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단의 인과적인 ‘정당성’이 아니라 말로 따지는 간주체적(intersubjective) ‘정통성’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경우, 결정과정들을 독점해 왔던 권력기구들에 대해 저항하면서 불가피하게 공중들 사이에서 의혹이 일고 토론이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모든 일이 갑자기 공중 사이에서 정통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하부정치의 출현으로 민주주의가 경영, 경제, 과학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사적 생활의 영역과 같은 비정치적인 영역들까지 확장, 심화되고 있고 나아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정통화하고 항구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개조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Beck 2000: 188).

미하고 배제(원자화)는 지양대상을, 포용(개인화)은 목적이며 근본화는 그에 대한 합리성의 재구성적 자기비판의 응전이자 수단이다.

재근대화 논의의 정치적 함의를 살펴보면 재근대화 논자들은 ‘제3의 길(The Third Way)’이 자신들의 논의와 친화적임을 곳곳에서 밝히고 있다. 이는 기든스가 재근대화와 제3의 길의 양 논의의 대표적 논자라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위험사회의 출현은 블레어의 신노동당 기획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Franklin, 1998: 30-31). 플랜클린(Franklin)은 공동체의 이상화된 상에 기반을 두어서 변화에 저항하려는 당위의 정치인 ‘향수적 공동체의 정치(politics of nostalgic community)’와 재근대의 제조된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위험사회의 정치(politics of risk society)’를 구분하는데 이는 위험사회의 맥락에서 구좌파와 제3의 길을 정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위책: 2-3).

벡은 사회과학에서 벌어진 1990년대의 논쟁들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것에서 옛 형태들과의 단절과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의 새로운 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그 열쇠가 어디에 있는가를 해명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그 논쟁들로 재근대화와 제3의 길 등을 동시에 거론한다. 그리고 재근대화와 제3의 길 논의의 공통점으로 인간조건이 개방되는 개인화와 희망과 의심이 공존하는 그 결과의 양가성과 함께 이론적, 정치적 측면에서의 반(反)신자유주의를 지적한다(Beck, 2000b: 22-23).

제3의 길 논자들도 자신들의 논의의 모든 곳에서 근대화(modernization)라는 수사를 거의 언제나 사용할 정도로 근대화는 그 사용이 빈번한 숙어인데 스스로를 근대화론자(modernizer)라 칭하고 구좌파를 전통주의자(traditionalist)로 말한다. 제3의 길 논의에서 근대화는 “세계화하는 정보 질서의 요구들에 대응해 사회제도들을 개혁”하는 것을 의미하고(Giddens, 2000a: 32) 이로부터 평등을 포용으로 불평등을 배제로 재설정하며 ‘영구 수정주의(permanent revisionism)’를 오명이 아니라 자랑으

로 여기는데 이는 자기비판의 ‘진보의 진보’로 진보주의를 근본화 하는 재근대화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K C I

참고문헌

- 박영도. 1994. “현대 사회이론에서의 비판 패러다임의 구조변동”, 서울  
대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양신규·류동민. 2000. “신경제와 벤처현상의 이해.” 『경제와 사회』 제  
47호.
- 오경석. 2004. “성찰적 근대화론에 관한 비판적 조망.” 『동향과 전망』  
여름호
- 임현진·정일준. 1999. “한국의 발전경험과 성찰적 근대화.” 『경제와 사  
회』 제41호.
- 정태석. 2002. “백의 재귀적 현대화 이론과 개인화의 딜레마.” 『경제와  
사회』 가을호
- 주성수. 1999. 『시민사회와 제3섹터』, 한양대 출판부.
- 천선영. 2002. “‘합리성의 합리성’을 다시 묻는다.” 『사회와 이론』 창  
간호
- 황태연. 1994a. 『환경정치학과 현대정치사상』. 나남출판.
- \_\_\_\_\_. 1994b. “포스트모던 정치이념; 료파르의 사상을 중심으로.” 정  
치경제학회 발표. 미공간 초고.
- \_\_\_\_\_, 1995a, “근대기획에 있어서의 세계시민과 영구평화의 이념.” 유  
럽연구 제3호
- \_\_\_\_\_. 1995b. “근대 합리성 이념과 환경위기의 합리적 이해.” 미공간  
초고.
- \_\_\_\_\_. 1996. 『지배와 이성: 정치경제, 자연환경, 진보사상의 재구성』  
창작과 비평.
- \_\_\_\_\_. 1999. “자본주의의 근본적 변화와 제국주의의 종식.” 『계간 사  
상』 겨울호.
- \_\_\_\_\_. 2000. “세계시민사회와 세계적 민주주의의 문제.” 임혁백, 안석교 외.  
『새천년 한국과 세계』, 나남출판.
- \_\_\_\_\_. 2004. 『계몽의 기획: 근대정치사상연구』. 동국대 출판부.
- \_\_\_\_\_, 엄명숙. 1994. 『포스트 사회이론과 비판이론』. 푸른산.
- Anheier, H. et al. 조효제, 진영종 역. 2004. 『지구시민사회: 개념과 현실』

아르케.

Beck, U. 1997. 홍성태 역. 『위험사회 :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새물결.

\_\_\_\_\_. 1998a. *Democracy without Enemies*. Polity.

\_\_\_\_\_. 문순홍 역. 1998b. 『정치적 재발견』. 거름.

\_\_\_\_\_. 1999a. "Goodbye to All that Wage Slavery." *New Statesman* 5(5).

\_\_\_\_\_. 1999b. *World Risk Society*. Polity

\_\_\_\_\_. 조만영 역. 2000a. 『지구화의 길』. 거름

\_\_\_\_\_. 2000b. *The Brave New World of Work*. Polity.

\_\_\_\_\_, and E. Beck-Gernsheim. 강수영·권기돈·배은경 역. 1999.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새물결.

\_\_\_\_\_. and E. Beck-Gernsheim. 2002.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Sage.

\_\_\_\_\_. and W. Bonss and C. Lau. 2003. "The Theory of Reflexive Modernization" Theory, *Culture and Society*. 20(2).

\_\_\_\_\_. and J. Willms. 2004. *Conversation with Ulrich Beck*. Polity.

Gryant, C. G and D. Jary. (eds). 2001. *Contemporary Giddens: Social Theory in a Globalizing Age*. Palgrave.

Foucault, M. 1994. "계몽이란 무엇인가" 김성기 외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뫼음사.

Franklin, J. (ed). 1998. *The Politics of Risk Society*. Polity.

Giddens, A.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_\_\_\_\_.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Polity.

\_\_\_\_\_. 1994. *Beyond Left and Right*. Polity.

\_\_\_\_\_. 1998a.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Polity.

\_\_\_\_\_, 1998b.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s)." <http://www.lse.ac.uk/Giddens/FAQs.htm>

\_\_\_\_\_. 1999. "Risk and Responsibility." *Modern Law Review* 62(1).

\_\_\_\_\_. 2000a. *The Third Way and its Critics*. Polity.

\_\_\_\_\_. 2000b. *Runaway World : How Globalization Is Reshaping Our Lives*. Polity.

\_\_\_\_\_. (ed.) 2001. *The Global Third Way Debate*. Polity.

- \_\_\_\_\_. 2002. *Where Now for New Labour?* Polity.
- \_\_\_\_\_, U. Beck. and S. Lash. 1994. *Reflexive Modernization: Politics, Tradition and Aesthetics in the Modern Social Order*. Polity.
- \_\_\_\_\_, and C. Pierson. 1998. *Conversations with Anthony Giddens*. Polity
- \_\_\_\_\_, and W. Hutton.(ed.) 2000. *On the Edge: Living with Global Capitalism*. Jonathan Cape.
- \_\_\_\_\_. J. Gray, F. Halliday, D. Held, and M. Kaldor. 2001. "Globalization: Where next?" [http://www.lse.ac.uk/cgi-bin/cached\\_xslt?xml=2001%2F10%2F18%2F20011018t1030z001.xml&xsl=events\\_wrapper.xsl](http://www.lse.ac.uk/cgi-bin/cached_xslt?xml=2001%2F10%2F18%2F20011018t1030z001.xml&xsl=events_wrapper.xsl)
- Held. D., McGrew, A., Goldblatt, D. and J. Perraton. 조효제 역. 2002. 『전 지구적 변환』. 창작과 비평사.
- Holzer. B and M. P. Sorensen. 2003. "Rethinking Subpolitics." *Theory, Culture and Society*. 20(2).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Univ.
- Jessop, B. et al. 1988. *Thatcherism: A Tale of Two Nation*. Polity.
- Lash. S. 2003. "Reflexivity as Non-linearity" *Theory, Culture and Society*. 20(2).
- \_\_\_\_\_. and J. Urry. 1987. "The End of Organized Capitalism." in Waters, M. (ed).
- \_\_\_\_\_. 1999. *Modernity: Critical Concepts* 4. Rout ledge.
- Latour. B. 2003. "Is Re-modernization Occurring-And If So, How to Prove It?" *Theory, Culture and Society*. 20(2).
- Leisering, L and S. Leibfried. 1999. *Time and Poverty in Western Welfare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vitas, R. 1998. *The Inclusive Society?: Social Exclusion and New Labour*. Macmillan Press.
- Littlewood, P. et al. 1999. *Social Exclusion in Europe: Problems and Paradigms*. Ashgate.
- McGrew, A. G. 1992. "Conceptualizing Global Politics." in McGrew, A. G. Lewis, P. G. et al. (eds). *Global Politics*. Polity.
- Nye, Jr. J. S. 2004. *Soft Power*. Public Affair.

Waters, M. 이기철 역. 1998. 『세계화란 무엇인가』. 현대미학사.

Welsch, B. 1994. “근대, 모던, 포스트모던.” 김성기 외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민음사.

K C I